

“도로명주소 안내판 필 요한 곳 신청하세요”

- 연말까지 기초번호판 및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

충남도는 도로명주소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도로명판 2만 6,992개, 건물번호판 43만 3,236개 등 총 46만여 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치위치 적정여부 훼손 및 누락여부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여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현황 등으로, 점검 결과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했다.

도는 일제점검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건물이 없는 장소나 버스 승강장 등에 기초번호판을, 교차로·이면도로·골목길에는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등을 추가 설치해 정확한 주소찾기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해 도민들이 기존 안내시설이 훼손된 곳이나 추가 설치할 곳을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나 도로명주소팀(☎ 041-

635-2865)으로 알려주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원리를 알면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새 주소체계”라며 “도로명주소가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 주소 또는 찾고자 하는 주소는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과 스마트폰 앱(App) ‘주소찾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27개 사업 신청

- 공동양식장 해상 종합 쉼터 濟光린 건립 등 148억 원 규모

충남도는 서해안 유류유출 피해 지역에 대한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모두 27개 사업 148억 3,000만 원(지방비 포함 202억 9,400만 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신청 사업은 지난해 9월 열린 제3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18개 사업 중 국가 시행 1개 사업을 뺀 17개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10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을 보면, 보령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 3억 5,000만 원, 서산 '공동 양식어장 해상종합 쉼터' 2억 1,000만 원, 당진 '선착장 태양광 가로등 건립 사업' 1억 500만 원 등이다.

또 서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해삼) 조성' 3억 원, 홍성 '어사항 해상가두리 낚시터 조성' 2억 원, '상황리 세척장 시설 조성' 2억 원, 태안 '해녀 휴게실 조성' 7억 2,000만 원,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8억 7,100만 원, 어민회관 건립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서산 '공동수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 15억 원, 서천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 시설 개선 사업' 10억 6,600만원, 태안 '관광 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10억 원, 태안 '안면해안관광도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5,000만 원 등은 계속 사업으로 신청했다.

도는 이번 신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국비 확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정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호응이 부족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예산까지 반영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제6회 유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결정된 20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되고, 관광 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은 올해 추진 중이다.

충남도 옛 관사촌, 문화·예술 공간으로

- 도, 대전시와 대부계약 체결…역사적 가치 보존·활용 힘쓰기로



충남도의 역사적 숨결이 켜켜이 쌓인 '충남도 옛 관사촌'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는 대전시 중구 대홍동에 위치한 관사촌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해 5월 14일 대전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도는 관사촌을 대전시에 5년간 무상 임대하고, 대전시는 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도와 대전시는 또 계약서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관리 원칙과 의무 이행 등을 담아 관사촌 보호를 위해 힘 써 나가기로 약속했다.

관사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사 건물들이 모여 ‘촌(마을)’을 이룬 곳으로, 일제 강점기인 1930~40년대 도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을 위해 조성됐다.

규모는 1만 355m²(11필지)의 토지에 옛 도지사 공관을 비롯, 10개동(1,822m²)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히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난 2012년 말까지 사용돼 온 도지사 공관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거처로 사용하며 UN군의 참전을 공식 요청한 역사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지난 2012년 말부터 관사촌 10개 건축물을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사촌 매각을 위해 도의회 의결과 감정평가(76억 원)를 거쳐 일반에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매입을 타진해온에 따라 매각 추진을 보류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강창희 국회의장 제출안)에 관사촌도 국가가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개정안 처리 시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전시에 대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이번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대전시와의 상생 발전 토대 마련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관사촌 훼손 예방, 연간 4,000만 원에 달하는 경기용역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박범신 작가 초청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9일 연구원에서 박범신 작가를 초청해 “사람이 사는 4가지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충발연 개원 19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오늘 자리에서 박범신 작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밀려 상상력과 사랑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발연도 여러 분야에서 객관적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때, 인문학적 통찰력을 더하게 된다면 충남의 정체성에 기반한 보다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범신 작가는 1946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여름의 잔해’로 데뷔했다. 대표작으로는 ‘소

금’, ‘은교’, ‘소소한 풍경’, ‘출라체’ 등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김동리문학상, 한무숙문학상,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충남 고유의 농어촌자원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해야

– 5월 28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농어업유산 발굴 세미나’ 개최



충남도 농어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훌륭한 자원을 발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은 5월 28일(수) 오후2시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충남 농어업유산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농어촌유산학회(회장 윤원근)와 공동 개최한 것이다.

농어업유산을 지정하는 제도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과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이 있다. 최근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도 뱃담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충남은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이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어촌연구원 박윤호 박사가 “농어업유산의 이해 및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를 설명하고, 명소IMC 황길식 대표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사례-청산도 구들장논”을 소개했다.

또한 협성대학교 윤원근 교수의 진행으로 단국대 김태연 교수, 충발연 유학열 연구위원, 충남도 양장목 팀장, 한겨레신문 전진식 기자 등을 비롯한 각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충남의 농어업유산 후보자원에 대한 논의와 활용 방안을 토론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충발연 유학열 연구위원은 “앞으로 농촌개발의 패러다임은 지역자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보전·계승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농어업유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도내 자원들을 발굴·보전·재평가해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유산이란 농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전통적 농업시스템과 농촌생활시스템을 말하며, 핵심적 가치는 주로 생물다양성, 경관, 토지이용시스템 등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예산 사과 농장 봉사활동’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 23일 충남 예산군 사과농장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충발연 임직원 90여 명은 각 조별로 사과 봉지 씌우기와 접순 따기 등 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거들었다.

특히 이 지역 사과농장들은 사과 생산은 물론 사과로 만든 와인을 제조·유통·판매하고, 방문객 교육과 체험 등 충남의 6차산업화를 선도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이미 6차산업화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 와 보니 앞으로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가을에는 저 사과를 수확하는 기쁨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수원시정 연구원, 상생발전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은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손혁재, 수원연)과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교류 사업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16일 수원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시·도민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무엇보다 연구과제의 공동협력,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정보 공유 등 정책의 연구와 개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을 비롯한 행궁동 마을만들기 선진사례를 둘러보며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비록 수원연이 설립된 지 14개월밖에 안됐지만, 인문사회와 도시환경 분야에 탁월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연구 노하우를 충남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